

패스트트랙 합의... 공수처법 타결

자유한국당 뺀 여야 4당, 어제 국회서 합의문 발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제한적 기소권 적용기로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22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처리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도출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패스트트랙에 태울 고위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 개혁법안의 세부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지난 3월 17일 4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미세조정된 선거법 관련 개정안을 마련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공수처법은 신설되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신청할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 중 판사, 검사, 경찰의 경우판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된 경우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등 검찰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는 여야 각 두명씩 위원을 배정하고, 공수처장은 위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지정한 1인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

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공수처 수사·조사관은 5년 이상 조사, 수사, 재판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경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4당 위원들 간 합의사항을 기초로 법안의 대안을 마련해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했다.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사 증거 능력은 제한하되 법원 등의 의견수렴으로 보완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이번 합의문에 대해 각 당내 추인을 거쳐 오는 25일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의 패스트트랙 적용을 책임지고 완료하기로 했다.

본회의 표결은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순서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자유한국당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 적용 후에도 한국당과 성실히 협상에 임해 여야 5당이 모두 참여하는 합의 처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합의안에 담았다.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늦어도 올해 5월 18일 전에 처리하기로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전건의 법안 처리일수 단축과 법제사법위원회 자구심사 일정 개선 등 국회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처리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방안 등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연합뉴스

주민·관광객 모두를 위한 관광활성화 방안은

ITOP포럼 국제세미나 내달 29일 ICC제주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세계 섬지역 관광정책의 공유와 확산을 위해 '2019 ITOP포럼 국제 정책 세미나'를 오는 5월 29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지역주민과 관광객 모두를 위한 지역관광 활성화'로 최근 세계 섬 지역 공통의 관심사이다.

주제설정 배경은 전 세계적으로 관광활성화로 관광 소득의 낙수효과

가 이슈화됨에 따라, 주민참여형 지역관광을 통해 경제, 사회,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관광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주포럼의 주요 세션으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제주를 비롯해 일본 오키나와, 태국 푸켓, 인도네시아 발리, 말레이시아 페낭, 스리랑카 남부주 등 6개 지역에서 참가해 세계관광의 흐름과 지역관광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과 사례에 대해 발표·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대리기자 bigroad@ihalla.com

도, 개별공시지가 열람 기간 '찾아가는 현장상담제' 운영

제주특별자치도는 개별토지 열람기간인 오는 30일부터 5월 7일까지 '찾아가는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제주도는 열람기간 중 개별토지가 격 검증을 담당한 감정평가사와 토지소유자가 직접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도민의 의견수렴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상담은 전화 상담과 방문상담제를 병행한다.

방문상담은 제주도가 읍·면지역을, 행정시가 동지역을 맡는다. 운영일정에 맞춰 방문하면 도민 누구나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소진기자



제주 통일트랙터 출정식 22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통일트랙터 품앗이 및 제주농업 남북교류협력운동본부'가 제주 통일트랙터 출정식을 열어 통일트랙터 마련을 위한 모금 활동 경과와 앞으로의 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분양 주택 취득세 감면·공기 연장 추진

도, 국토부에 제도개선 건의 미분양 주택해소 TF서 논의

최근 제주도가 미분양 주택 문제와 도내 주택건설경기 침체가 맞물려 주택건설업체의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미분양 주택 취득세 감면과 공사기간 연장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에 미분양 건축 착공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미분양 지역의 주택에 대해 착공시기를 2년 이내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또 제주도는 지난 13일 기획재정부에 지방세입 제도개선 토론회자료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책'을 제출했다. 세부적인 감면 수준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제도개선 추진은 제주도가 구성한 '미분양 주택 해소 T/F'를 통해 이뤄졌다.

제주도는 지난달 6일 제주도개발공사·LH 등 관련 단체·기관 및 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했다. 활동기간은 미분양 해소 때까지며, 회의는 월 1회로 정례화 됐다.

첫 회의때 건의됐던 ▷건축 착공시기 조정 ▷세제 감면 등은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반영되고 있으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미분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은 장기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16일 열린 2차 회의에서는 ▷미분양주택 단계별 대응체계구축

(주택지표 설정 모니터링 등을 통한 조기경보시스템화) ▷인·허가 및 사업승인시 미분양지역 정보제공 ▷금융지원에 대한 금융권 협의 ▷분양승인시 홍보 내용 적정성 확인 등을 통한 과장 분양가 통제 ▷기존주택 매입대상확대 및 활용용도 다양화 검토 등이 논의됐다.

제주도는 이날 안전을 다음 T/F회의 때까지 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은 "미분양 주택해소를 위해서는 민간부분의 분양가인하 및 임대주택 전환 등 자구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더불어 T/F팀에서 발굴하는 다양한 정책 수행은 미분양주택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소진기자 sj@ihalla.com

서귀포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10월까지 시설물 상태 등 점검

서귀포시는 올해 10월까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건물번호판 5만9450개, 도로명판 7463개, 기초번호판 1576개, 지역안내판 16개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이다.

시는 도로명주소 전용 태블릿(스마트KAIS)을 활용해 시설물의 상태 및 설치 위치, 누락 등을 점검조사할 계획이다.

시는 조사결과에 따라 오래된 시설물 가운데 보수 조치가 필요한 시설물은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이와더불어 보행자가 이용하는 골목길이나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보행자용 도로명판을 추가 확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도로명안내시설물 일제조사를 통해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시민들의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올해 4월 기준 신규 도로명판 317개소 및 훼손 시설물 91개소를 보수했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창간 30주년

행복한 제주! 건강한 신문!!

한라일보 창간 30주년을 축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장 강지언 대의원회 의장 김경진

수석부회장 김용범	부회장 이권호	고현심	이석재	김 원	부의장 김동규	박재남	
총무이사 윤진호	법제이사 이태유	학술이사 문이상	대외협력이사 심재현	총무이사 송대성	공보이사 박철민	재무이사 주현이	감사 이승희
의무이사 이정훈	공보이사 강은철	재무이사 고정원	감사 최문영	의무이사 정유남	정책이사 박형근	정보통신이사 장순봉	정보통신이사 김영규
보험이사 김창순	정책이사 이영일	정보통신이사 유현욱	특별사업이사 한승태	학술이사 이재천			

제주시 오라남로 45, TEL. 064)757-4640, FAX. 064)757-4590

창간 30주년

한라일보를 펼치면
행복한 제주의 미래가 보입니다.

한라일보 창간 30주년을 축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회장 이상기

수석부회장	현경철	외무부회장	강준혁	내무부회장	문창민
내무이사(복지)	황학수	법제이사	정원근	무임소이사	안효수
보험이사	정성인	학술이사	김성진	무임소이사	이상훈
총무이사	이경원	약무이사	최우석	정보통신이사	홍상철
보험이사	이창승	홍보이사	정덕희	대의원총회의장	김성인
재무이사	정원근	국제이사	박준상	대의원총회부의장	김성은
홍보이사	정원근	국제이사	최미영	감사	김성중
의무이사				감사	

제주시 국기로 36 성은빌딩(4층) TEL. 751-3545 FAX. 751-2579